

2020년 경찰간부후보생(2019.10.5.)

• 해설 : 이승철

- 01 공공서비스를 소비의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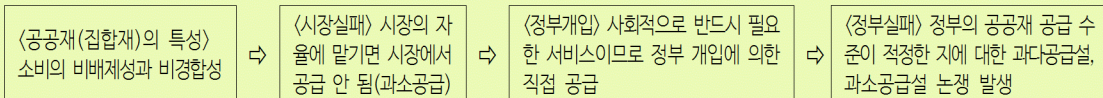
2020 경간부

특성		경합성 여부	
		비경합성	경합성
배제성 여부	비배제성	㉠	㉡
	배제성	㉢	㉣

- ① ㉠ - 시장에서 공급할 경우 무임승차 문제나 과다공급 또는 과소공급에 의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② ㉡ - '공유재의 비극'을 초래하는 서비스로서 공급비용 부담 규칙과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규제 장치가 요구된다.
 ③ ㉢ - 기본적인 수요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부분적인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④ ㉣ - 일반적으로 시장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어 공공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영역이다.

해설

① (×) ㉠은 공공재(public goods), 집합재(collective goods)로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므로, 시장에서 공급할 경우 무임승차나 과소공급에 의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시장에서 공급시 과다공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공재가 과다공급 문제를 야기하는 것처럼 쓰인 책이 「재행정학 2.0」(이중수와 공저)이다. 그 내용 중 '집합재(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 때문에 항상 과소 공급과 과다 공급의 쟁점을 야기시키는 만큼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틀렸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하도록 둘 경우 과소공급을 초래한다(요금을 못 받으므로 생산하려 하지 않으며, 생산되더라도 구매할 경우 배타적 사용권이나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아 사려고 하지도 않으므로 시장에서 공급이 어렵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화이지만 시장에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이다(만약 시장에서 과다공급된다면 정부가 직접공급 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것이 아니라 공급을 축소하도록 규제를 가할 것이므로 시장에서의 공공재 과다공급은 맞지 않음). 이러한 정부개입에 의한 공공재 공급이 적정수준에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 있고 과소공급·과다공급 논쟁이 제기된다. 과소공급과 과다공급의 쟁점이 야기되므로 공공부문이 공급한다는 것은 선후관계가 맞지 않다. 즉, 정부가 개입하여 직접 공급할 경우 과소·과다공급 논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② (○) ㉡ 공동소유재·공유재(common-pool goods) : 특정 주인이 없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므로 개별적으로 소유·소비할 수 없고 소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비의 경합성(선착자 우선원칙 적용)이 있는 재화이다. 비배제성으로 인해 과잉소비에 따른 자원 고갈과 공급비용의 귀착 문제(비용 회피)를 초래한다. 공유재 공급은 일정한 반면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경쟁적으로 차지하려는 수요가 많아 이를 방지하면 이기적인 개인들에 의해 자원이 고갈되어 모두가 피해를 보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는 자원고갈 방지를 위해 공공·소비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규제를 설정. 예) 어획량제한, 낚시면허제)를 가하거나, 공공부문에서의 공급비용 부담(예) 정부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나 예방접종) 방식으로 대응.
- ③ (×) ㉢은 요금재에 해당하는데 설명 내용은 민간재(사적재)에 대한 설명이다.
 요금재·유료재(toll goods) : 소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경합하지 않고 소비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소유·소비할 수 없는 재화이다. 전기·수도·가스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며 고정비용이 변동비용에 비해 매우 높은 요금재의 경우 막대한 초기 구축비용이 소요되고 규모의 경제효과가 크므로 생산규모를 늘릴수록 단위당 생산비용(평균비용)이 하락하는 비용체감산업의 특징을 지닌다. 이 경우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독점체제가 형성(자연독점)되면서 과소공급되는 시장실패를 초래. 따라서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규제를 가하거나 공기업(예) 한국전력공사)을 설립하여 직접 공급하면서 가격통제를 함. 하지만, 오늘날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요금재의 배제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민영화 등 민간기업의 참여가 논의되고 있음.
- ④ (○) ㉣ 사적재(private goods, 민간재·시장재) : 원칙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사적재는 소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소비의 경합성이 존재하고 개별적인 분할 소유·소비가 가능한 재화로 시장에서 공급·소비되는 재화이다.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이 생산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공익차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서비스의 안정성과 규격기준 설정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적 수요의 충족(예) 저소득층 쌀 제공) 등에 부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교육, 의료, 후생주택 등 가치재의 경우에는 사적재이지만 민간에서 과소공급 또는 과소소비 되므로 일정수준 정부가 공급하거나 소비를 장려한다.
- 정답 여부 : 공공경제학이나 재정학 책 어디에도 시장에서 공급될 경우 공공재가 과다공급되어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재행정학 2.0」의 내용이 잘못 쓰인 것인데 과거에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옳은 지문으로 출제하면서 이를 토대로 ①번 지문도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①번 지문은 명확히 틀린 내용이다. 따라서 답을 ①③으로 본다.

답 ①③

- 0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경간부

- ① 부르디외(P. Bourdieu)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② 사회적 자본은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만들어 거래비용 감소의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③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대가 없는 봉사를 말한다.
 ④ 사회적 자본은 집단결속력으로 인해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해설

- ① (○) P. Bourdieu는 미시적 관점에서 친근감이나 상호 인지적 관계가 제도화거나, 지속적인 연결망이 유지되어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 및 가상으로 얻게 되는 이점이나 기회의 총합으로 사회적 자본을 바라보았다.

• 사회적 자본 연구 동향

구분	미시적 접근	거시적 접근
의의	- 사회자본을 개인이나 집단이 형성하는 관계의 유형으로 파악(연결망 분석이라는 계량적 방법을 통해 연구). - 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비해 자원동원 측면에서 유리한 혹은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느냐의 문제로 귀결.	- 사회자본을 지역공동체나 국가사회의 특성으로 파악하여 그 사회의 전통·신뢰·협동 같은 호혜성에 기반을 둔 가치나 관계를 어느 정도나 뒷받침하는가에 초점. - 문화나 조직의 차원에서 파악된 사회의 특성이 그 사회의 민주주의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가 혹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관심.
사회 자본의 의미	-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P. Bourdieu, 1986). - 행위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 있는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자산(Lin, 2001). - 사회적 연결망(network) 혹은 사회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Portes, 1998).	- 상호간 이익을 위한 협력과 협동을 촉진시키는 연결망,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 협력적 네트워크, 호혜의 규범, 사회적 신뢰가 사회자본의 핵심 구성요소(R. Putnam, 1995). - 신뢰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태를 보이는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기대이며 국가의 복지수준과 경쟁력은 사회에 내재하는 신뢰수준이 결정한다(Fukuyama, 1995).

- ② (○) 사회자본은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므로 계약을 위한 협상 등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 ③ (×) 사회적 자본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주의적 지향성을 가지지만 대가 없는 봉사를 특징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자본은 자발적이며 수평적으로 형성되는, 개인간 또는 집단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네트워크를 속성으로 가진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호혜주의적(互惠主義的) 특성을 지니며, 구성원들은 자기에게 필요할 때 언제든 보답을 받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한다(단, 등가물 교환관계나 동시적 교환관계는 아님). 이러한 행태를 '친사회적 행태'(prosocial behavior)라 한다.
- ④ (○)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 또는 집단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네트워크의 속성을 지니며 친사회적 행태를 강화하므로 한 집단 내에서 형성된 사회자본은 새로운 구성원에 대하여도 높은 신뢰를 갖게 해준다. 그러나, 한 집단의 지나치게 강한 결속과 신뢰는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배척·폐쇄성 등 부정적 효과를 갖게 할 수도 있다.

답 ③

03 윌슨(Wilson)은 규제정치를 아래 표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A~D에 들어갈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20 경간부

규제비용		규제의 편익	
		집중	분산
		A	B
	집중	C	D
	분산		

- ㉠ A는 쌍방이 막강한 정치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참여하게 대립 되는 경우로서 규제기관이 어느 한쪽에 장악될 가능성이 약하다.
- ㉡ A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수입규제,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가 해당된다.
- ㉢ B는 의제채택이 가장 어려우며 극적인 사건이나 재난, 위기 발생이나 운동가의 활동에 의하여 규제가 채택된다.
- ㉣ B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음란물규제, 낙태규제, 차별규제가 해당된다.
- ㉤ C은 조직화된 소수가 포획 등 강력한 로비활동으로 다수를 압도·이용하는 미시적 절연이 발생한다.
- ㉥ D의 상황에서는 쌍방 모두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규제의 필요성이 공익단체에 의해 먼저 제기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J. Q.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감지된 규제의 비용 (비용부담집단)		감지된 규제의 편익(수혜자집단)	
		집중(특정 소수)	분산(불특정 다수)
		A. 이익집단정치모형 예) 의·약분업, 한·약규제, 노사관계규제, 중소기업고유업 종규제	B. 기업가적 정치(운동가의 정치)모형 예) 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유해성 물품 에 대한 위생규제, 원자력발전 안전규제
	집중 (특정 소수)		
	분산 (불특정 다수)	C. 고객의 정치모형 예) 진입규제(의사·변호사 등 직업면허, 인·허가제도), 농 산물 최저가격규제, 수입규제	D. 대중정치(다수제적 정치)모형 예)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낙태·종교활동에 대한 규제, 신문·방송·출판물 등 언론에 대한 윤리규제, 사회보장법, 음란물 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등

- ① (○) A-이익집단정치에서는 비용부담자와 편익의 수혜자 모두 강한 정치적 행동 동기가 발생하고, 자기집단의 비용 감소나 편익 극대화를 위해 참여하게 대립하며 이익갈등을 강하게 표출된다. 이익집단 간 갈등 때문에 수혜자집단과 비용부담집단 중 어느 한 쪽을 편들기 힘들며, 최종적으로는 양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타협해야 한다. 어느 일방이 계속적으로 규제기관이나 규제정책을 지배할 수 없고, 규제기관이 어느 한 편 이익집단에

장악될 가능성이 약하다. 이익집단 쌍방이 강한 결속력과 엇비슷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므로 정부가 중립적 이해조정자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규제 내용도 쌍방이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선언하는 협약(carter) 형태를 띤다.

- ㉔ (×) 수입규제,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는 C(고객의 정치)에 해당한다.
- ㉕ (○) B-기업가적 정치에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들은 잘 조직화되어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규제는 비용부담집단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루어져야 하며, 수혜자집단은 잘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고 정치적 활동도 미약하여 규제를 위한 집단행동의 가능성은 약하다. 따라서, 정책기업가(entrepreneur; 운동가)나 사건(crisis, scandal; 위기·재난)이 있어야 규제가 행사될 수 있다. 기업가적 정치상황이 유발되려면 잠재적인 대중의 이해관계를 촉발하여 광범위한 관심을 유발하고, 제언된 정책에 반대하는 소수집단을 무력하게 할 수 있는 유능한 기업가(운동가)적 역할을 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정치적 계기나 사회분위기의 형성도 중요하다. 정부규제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경제·사회적 위기, 재난, 정권변동 등 특별한 계기나 공익집단의 활동이 필요하다.
- ㉖ (×) 음란물규제, 낙태규제, 차별규제는 D(대중의 정치)에 해당한다.
- ㉗ (○) C-고객의 정치에서는 소수 수혜자 집단은 잘 조직화되어 규제기관의 정책형성 및 집행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들의 편익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정부관료(규제기관)가 이익을 받게 되는 소수 수혜자집단(피규제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Agent)을 수행하는 지대추구현상(Rent Seeking)이나 포획현상(capture)이 강하게 나타나고, 양자 간 공생관계를 보이며, 전체국민의 공익은 저해될 수 있다. 정부규제 도입 과정에서 조용한 학호교섭과 로비가 나타나며 소비자단체 등 공익집단의 항의나 반박이 없는 한 별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고객의 정치는 정부실체 원인 중 비용(비용부담집단)과 편익(수혜자집단)의 절연 중 미시적 절연(편익은 소수 누리고, 비용은 다수가 부담)과 관련된다.
- ㉘ (○) D-대중의 정치에서는 정부규제에 대한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쌍방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지만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다(감지된 비용과 편익 모두 분산). 양 집단에서 모두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나타나고 특정 이익집단의 활동에 의한 규제 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규제의 필요성이 공익단체에 의해 먼저 제기된다.

4

04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에 관한 논의 중 과다공급설에 해당 하는 것은?

2020 경간부

- ① Musgrave의 조세저항 ② Downs의 합리적 무지
③ 보몰병(Baumol's Disease) ④ Galbraith의 의존효과

해설

③ 보물병은 공공재의 과다공급설.

공재의 과소공급설

갈브레이드(J. Galbraith)의 의존·선전효과	• 민간재 ⇒ 생산자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광고·선전 등의 수단으로 소비자의 욕망을 자극 • 공공재 ⇒ 선전·광고 없음(의존효과가 없음) ⇒ 공격 욕구의 자극 미흡 ⇒ 공공재의 과소공급
듀젠베리(J. Duesenberry)의 전사·과시효과	민간재의 경우 타인의 소비에 자극을 받는 경향(과시효과 ; 후진국이나 저소득자가 각각 선진국이나 고소득자의 소비양식을 모방하여, 소비를 증대 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공공재에 대해서는 그런 경향이 약함.
머스그레이브(R. Musgrave) 의 조세저항 (Citizen's Failure)	민간재는 비용을 부담한 만큼 소비하므로 자신의 부담액만큼 자신의 편익으로 환원되지만, 공공재는 자신의 부담액보다 돌아오는 편익이 적다(조세와 소비 간 연계의 불분명성)고 판단하여 과도한 조세부담에 대해 저항(조세저항)하게 되고 재정부족으로 인한 공공재의 과소공급으로 연결됨. 조세저항으로 인한 적정 공공재의 공급 실패를 시민실패(citizen's failure)라고 함.
다운스(A. Downs)의 투표자의 합리적 무지 (Rational Ignorance)	합리적 개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며, 정보 수집에 따른 비용과 이에 따른 편익을 고려하여 정보수집 여부를 판단. 공공재의 경우 개인적 편익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으므로, 합리적 의사결정자는 공공재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수집을 하지 않음.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투표자는 합리적 무지의 상태에 있고, 이들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그 확대에 대해 저항하게 됨.

공공재의 과다공급설

바그너(A. Wagner)의 법칙	경제발전과정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하는 현상(공공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큼). 국가경제의 성장(1인당 GNP의 성장), 도시화의 진전은 재정지출 확대 요인
피콕(A. Peacock)과 와이즈만(J. Wiseman)의 대체효과(전위효과)	전쟁·재난·위기시 증대된 조세는 평시로 환원되어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재정이 팽창. 원래는 민간에서 사용될 재원을 정부가 사용하게 되므로 공공지출(정부지출)이 민간지출(사적지출)을 대체하게 됨
보물병(비용질병)	정부서비스의 노동집약적인 생산구조(정부지출 중 인건비 비중이 높음), 민간부분보다 낮은 생산성. 공공재에 대한 수요는 가격비탄력적(필수재인 경우가 많으므로, 가격[공공재 공급비용] 변동에 대해 둔감함)
재정착각(재정환상) (fiscal illusion)	재정착각이란 납세자들이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의 귀착에 대한 인식능력을 상실한 상황으로 정부서비스의 편익이 무형적이고 정부서비스 비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조세를 납세자가 감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각현상. 간접세, 공채 발행, 국고보조금 등에서 나타남.
제국형성 관료제국주의	조직의 관리자들은 불필요하게 인원, 예산, 기구, 권한 등을 무조건 확대하려는 경향을 지님. 파킨슨 법칙, 니스칸넨(W. Niskanen)의 예산극대화가설
로위(T. Lowi)의 이익집단지아주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이익집단의 다양한 활동이 나타나고, 영향력이 강한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정부기능 확대. 납세자의 돈으로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 충족에만 공공지출이 이루어지면 공유지의 비극 초래(활동적 소수의 피해).
브레넨(H. Brennan)과 뷰캐넨(J. Buchanan)의 리바이어던 가설 (Leviathan Hypothesis)	공공지출에 대한 통제 권한이 집중화될 경우, 정치인·관료·특수이익 로비스트들의 선호가 재정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규모가 과도하게 팽창.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다수결투표는 투표의 거래(vote trading), 즉 log-rolling에 의해 과다지출을 초래. 개별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표의 교환행위(담합)를 통해 서로 불필요한 사업을 끼워써 거래함으로써 정부사업 팽창.
양출제입(量出制入) : 세입과 세출의 비연계성	양출제입(量出制入)은 지출을 고려하여 수입을 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수입과 지출은 직접 연계되지 않음. 정부는 지출의 수요가 있으면 수입을 확대, 수입확대를 위해 정부는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반대급부 없이 강제 징수하는 세금으로 수입에 충당하므로 재정팽창이 발생.

지출한도(Expending Belt)의 부재(不在)	정부지출의 팽창을 통제하는 대항력(抗抗力) [拮抗力] : countervailing force)이 없으므로 재정이 팽창. 정부사업은 한번 생기면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자생력을 지님.
합거제 예산결정구조	예산을 합리적·총체적이지 않거나, 부문별로 결정·조정하는 편린적·합거주의적 과정을 거칠 경우 예산이 중첩 편성되고 낭비됨. 단방제 국가보다는 연방제처럼 분권화된 국가는 지역 간 중복되는 사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음.
국제시장에 대한 개방형 무역구조	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무역구조 하에서는 국가재정 팽창, 수입·수출 관련 정책과 외환관리, 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이 필요하기 때문임.
사회복지제도의 확산	사회복지정책 증대는 재정팽창을 초래하며 호황시 행한 사회복지 공공지출은 불황시 폐지가 어려움.
기타	경쟁이 치열한 소선거구제(선거과열에 따른 선심성 공약·사업 증대와 재정 낭비), 다원주의적 사회구조(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요구와 영향력의 증대에 따른 행정활동의 증가)

답 ③

05 다음 중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20 경간부

- ① 규범적·실질적이고 질적인 연구를 강조한다.
- ② 행태의 규칙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며 가치와 사실을 통합하고 가치중립성을 지향한다.
- ③ 정치와 행정현상에서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중시하였다.
- ④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해설

- ① (×) 경험적·실증적이고 계량적인 연구를 강조
- ② (×) 가치와 사실을 통합 ⇨ 가치와 사실을 분리
- ③ (×) 행태주의는 정치와 행정현상에서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이론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즉, 경험적 검증을 통하여 행정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반법칙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행태주의는 매우 상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여러 국가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유사성과 수렴적 경향을 강조하였다. 정치와 행정현상에서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중시한 것은 행태주의가 아니라 생태론적 접근법이다.
- ④ (○) 행태주의에서 연구의 기초단위는 인간의 개인적인 가시적 행태이다. 집단의 특성은 개인이 지닌 특성의 단순한 총합으로 보아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이다.

답 ④

06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20 경간부

- ㉠ 제도를 연구의 중심개념으로 사용하고 합리적 행동모형에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구제도주의와 차이점이 있다.
- ㉡ 접근방법의 범위가 넓고 경계는 느슨한 경향이 있으며 그 안에는 개별적 특성이 서로 다른 이론들이 들어 있다.
- ㉢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개인의 선호는 내생적으로, 즉 정치 체제가 개인의 선호를 형성하고 제약한다.
- ㉣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에 기반한 제도적 동형화 과정의 결과물로 본다.
- ㉤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의 접근법은 방법론적 전체주의와 연역적 접근법이 사용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 (×) 제도를 연구의 중심개념으로 사용하고 합리적 행동모형에 회의적이라는 점은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유사점이다. 구제도주의에서는 개인의 선호를 부정하고 다원론이나 합리적 행동모형에 대해 회의적 관점을 취하며,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하되 선호의 행사와 표출에 있어서 제도적 제약요인이 작용하므로 합리성이 제한된다고 본다.
- ㉡ (○) 신제도는 여러 학문에서 연구되었으며 학문간 경계가 느슨하고 서로 다른 뿌리의 학문들을 어떻게 통합하느냐의 과제가 남아 있다.
- ㉢ (○) 역사적 신제도는 행위자의 선호체계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도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행태주의에 의하면, 행위를 통해 표출된 선호가 개인의 진정한 선호이지만, 역사적신제도주의자에 의하면 동일한 선호를 지닌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제도적 구조에 따라 선호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행태주의에서는 행위가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며, 표출된 선호가 개인의 진정한 선호라고 인식한다. 역사적신제도주의에 의하면 동일한 선호를 가진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행위가 개인의 진정한 선호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선호란 제도적 구조의 내재적 산물이라는 것이다(선호의 내생성).
- ㉣ (×)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에 기반하여 제도가 형성된다는 것은 '선호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선호[효용]극대화 대안으로 제도를 형성하고 이 제도가 집단행동 딜레마를 해결하면 더 이상 제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균형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의미로서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론의 내용이다. 사회적 신제도론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하여 제도가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으로서 사회적으로 정당(적절)하다고 인정받는 구조와 기능을 닮아가는 제도적 동형화과정의 결과물을 제도로 본다.
- ㉤ (×)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의 접근법은 방법론적 전체주의와 귀납적 접근법이 사용된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의 접근법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연역적 접근법이 사용된다.

답 ③

07 신공공서비스론(NPS)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2020 경간부

- ㉠ 덴하르트(J. Denhardt & R. 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등장하였다.
- ㉡ 정부는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데 있어 방향잡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 ㉢ 이론적 토대는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등 복합적이다.
- ㉣ 공익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 아닌 개인 이익의 단순한 합산으로 보고 있다.
- ㉤ 민주적 시민정신이나 공익과 같은 가치들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 ㉠,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 (○)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이 간과하거나 경시한 행정의 공공성을 재조명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지향성과 고객중심의 행정, 정부축소, 능률성 이념, 기업논리만을 중시하고 시민의 정치성과 형평성·민주성을 무시하였다. 정부의 노릇기보다 방향키 역할을 강조하여 목적지 설정에 관한 관료권력만 강화시키고, 결국 고객중심을 주장하지만 정부의 소유자(배의 주인)인 시민들이 배제되었다. 신공공서비스론은 관료 중심의 권력배분적 시각보다 정부의 소유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재출발해야 한다고 보고 정책을 집행하면서 행정이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과 대응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적 제도 구축을 주장하였다.
- ㉡ (×) 정부는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데 있어 방향잡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가 시민과 지역공동체 내의 이익을 협상하고 중재하며,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봉사(service)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 ㉢ (○) 신공공서비스론의 이론과 인식의 토대는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해석학·비판이론·포스트모더니즘을 포괄한다.
- ㉣ (×) 신공공관리론은 공익을 개인 이익의 단순한 합산으로 보지만,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로 본다.
- ㉤ (○) 신공공서비스론은 행정의 규범적 가치에 관한 이론을 제시했을 뿐, 이러한 가치의 구현에 필요한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답 ③

08 롤스(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20 경간부

- ㉠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 이념적·가설적 상황으로서 원초적 상태를 설정하였고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정의의 원리를 도출한다.
- ㉢ 정의의 두 가지 기본원리 중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이며, 제2원리는 차등조정 원리이다. 제2원리 내에서 충돌이 생길 때에는 차등의 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한다.
- ㉣ 기회균등의 원리는 결과의 공평을 중시하며 차등의 원리는 기회의 공평을 중시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 (×)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의 양 극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이다.
- ㉡ (○) 전제조건인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란 공정한 합의의 조건이다. 정의의 원리가 도출되는, 즉 결정이 공정하고 전원일치의 합의가 가능한 이념적·가설적 상황을 연역적으로 전개한다.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정의란 공정한 배경 속에서 합리적 계약자들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되는 것(절차적 정의관)이며 그렇게 도출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균등 조건 아래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이 될 때만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 ㉢ (×) 정의의 제1원리(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와 정의의 제2원리(차등조정 원리 :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조정 원리)가 충돌할 때는 정의의 제1원리가 우선하며 기회균등원리와 차등원리가 충돌할 경우 기회균등의 원리가 우선한다.
- ㉣ (×) 기회균등의 원리는 기회의 공평을 중시하며 차등의 원리는 결과의 공평을 중시한다.

답 ①

09 행정에 있어서 가외성(redundan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경간부

- ① 가외성은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응성을 높여준다.
- ② 란다우(M. Landau)는 권력분립 및 연방주의를 가외성의 현상으로 보았다.
- ③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의 필요성은 증가한다.
- ④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이다.

해설

- ④ (×)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은 불확실성을 제거시키는 전략과 관련된다. 가외성은 불확실성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 장치를 마련하는 소극적 대처방안이다. 예) 스페어타이어(가외성)는 펑크(불확실성)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적극적 대처방안)가 아니라 펑크가 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장치(소극적 대처방안)이다.

답 ④

10 로위(Lowi)의 정책유형 중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정책유형은?

2020 경간부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일어난다.
- 선거구 조정, 정부조직이나 기구 신설, 공직자 보수 등에 관한 정책이 포함된다.

- ① 구성정책 ② 분배정책 ③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해설

•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 ㉠ 헌정(憲政)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관련된 정책 - 주로 정부기구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와 관련되며, 정치체제에서 투입을 조직화하거나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으로 게임의 규칙을 설정. [예] 정부기관 신설·폐지·변경, 선거구조정, 선거, 공직자 보수, 군인퇴직연금
- ㉡ 대외적 가치배분과는 거리가 먼 대내적 정책으로 정부의 총체적 기능(overhead function)에 초점을 두며 정부 권위의 성격(nature of government authority)을 나타내며 이러한 권위의 민주적 절차의 달성에 관심을 둬.
- ㉢ 선거구 조정과 같은 구성정책의 결정에는 정당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
- ㉣ 대체적으로 국가의 기본 틀이 확립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황 하에서는 헌정질서에 대한 변동이 미약하므로, 새로운 정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음(정치변혁이 작은 후진국에서는 새로운 구성정책이 자주 이루어짐). 최근 정책에서 제도(institutions)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답 ①

11 정책네트워크이론(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경간부

- ① 정책과정에 대한 국가중심 접근방법과 사회중심 접근방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 ② 정책공동체의 경우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가지며 참여자 사이의 관계는 교환관계이다.
- ③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 ④ 하위정부는 모든 정책분야에 걸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심이 덜하거나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분배정책 분야에서 주로 형성되고 있다.

해설

- ① (×) 정책네트워크이론은 다원론과 엘리트이론, 조합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으로 정책을 다양한 공식·비공식 참여자들 간 참여와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고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의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정책과정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다. 기존의 사회중심이론(다원주의)이나 국가중심이론(조합주의)이 지닌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적 논리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는 관점에서 1960년대 하위정부론과 1970년대 이슈네트워크론을 기반으로 하여 1980년대에 등장하였다. 다원주의 또는 조합주의라는 양자택일의 단일한 개념을 버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연계시키는 접근법이다. 철의 삼각, 이슈네트워크, 정책공동체 등 정책네트워크이론은 정책 및 정책 환경이 전문·복잡화 하면서 더 이상 국가 또는 사회의 특정세력이 정책과정을 주도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답 ①

12 정책의제설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20 경간부

- ① 동원형은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행정부의 영향력이 작고 민간부문이 발전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형이다.
- ②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등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사례는 외부집단이 주도한 외부주도형이다.
- ③ 포자모형은 정책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되는 환경보다는 정책문제 자체의 성격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다.
- ④ 동형화 모형은 정부 간 정책전이(policy transfer)가 모방, 규범, 강압을 통해 이뤄진다고 본다.

해설

- ①② (×)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이익집단이 취약한 후진국이거나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있는 경우에 나타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치지도자가 특정 사회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경우 나타난다. 행정부의 영향력이 작고 민간부문이 발전된 다원화·민주화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형은 외부주도형이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등은 동원형의 사례이다. 동원형은 정부 내에서 정책담당자(정부 내 최고정책결정자)의 주도하에 정부의제가 채택되고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공중의 관심·지원 확보 목적으로 정부가 행정 PR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정책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공중의 지지를 동원하는 과정(공중의제화)을 거친다.
- ③ (×) 포자모형은 정책문제 자체의 성격보다 정책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되는 환경적 여건에 주목한다.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는 있으나 영향력이 없는 집단의 이슈는 평상시에는 정부의 정책의제로 발전하지 못하지만, 곰팡이 포자가 온도·습도 등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면 균사체로 변하듯 적절한 환경적 여건(이슈촉발장치[triggering device] 마련, 이슈창도자의 적극적 역할 전개)이 조성되면 정책의제로 발전된다는 모형이다(영향력이 크지 않은 이해집단이라도 촉발장치가 마련되면 잠재적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여 정책의제화).
- ④ (○) 동형화(Isomorphism)이론에 따르면 어떤 조직이든 생성 시에는 다양한 형태로 출발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동질화의 압력이 나타나 동형화가 이뤄지며 의제설정과정도 동형화의 압력을 받는다고 본다. 정부들 간 정책전이현상(사회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아이디어의 전파)은 동형화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 널리 채택된 정책은 의제설정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용이하다고 본다. 동형화의 근거와 방식으로는 ㉠ 모방적 동형화(과거나 외국의 선례 활용. 자발적으로 주변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 강압적 동형화(국내경제활동이 대외경제에 의존하는 경우, 공식·비공식 압력에 의한 순응), ㉢ 규범적 동형화(특정 영역의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작업조건과 방법을 정의하고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를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형화)를 든다.

답 ④

13 행정에서 불확실성에의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경간부

- ① '적극적 대처방안'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방안을 말한다.
 ② '소극적 대처방안'은 불확실한 것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말한다.
 ③ '적극적 대처방안'으로는 모형이나 이론의 개발, 정책 델파이, 정보의 충분한 획득 등이 해당되며, '소극적 대처방안'으로는 분기점분석, 민감도분석 등이 해당된다.
 ④ 최악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악조건 가중분석으로 소극적 대처방안에 해당한다.

해설

- ④ (×) 최악의 불확실성을 전제하고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보수적(conservative) 접근이다. 최악의 경우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각 대안의 최악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중 가장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위험회피형 태도이다.

■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방안

적극적 대처방안	소극적 대처방안
불확실한 것을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만들. 불확실성의 적극적 해소	불확실성을 주어진 조건으로 보고 그 안에서 결과예측을 시도
① 상황에 대한 정보의 획득	① 보수적인 접근(최악의 상황을 가정)
② 미래예측기법의 활용 : 이론·모형의 개발 정책실험 정책델파이, 브레인 스토밍(난상토론)	② 가외성의 확보(중복적 대비, 복수의 대안준비)
③ 불확실성을 일으키는 상황이나 변수를 통제(환경에 대한 제어와 통제) :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환경을 통제가능한 내생변수화하여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상황자체를 통제 환경과의 협상·홍정, 적응적 흡수(cooptation)	③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
④ 보험 : 최악의 경우를 극복할 능력이 없을 때 보험을 이용해 불확실성에 대비	④ 악조건 가중분석(a fortiori analysis)
	⑤ 분기점 분석(break-even analysis)
	⑥ 상황의존도분석(contingency analysis of test)
	⑦ 한정적 합리성의 확보
	⑧ 휴리스틱 기법(Heuristics)
	⑨ 분권화(권한위임)
	⑩ 표준화·공식화 ※ 적극적 대처방안도 됨

답 ④

14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20 경간부

- ㉠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일련의 목표들을 설정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 비가분적 정책(indivisible policies)에 대해서는 점증주의 정책결정모형을 적용하기 용이하다.
 ㉣ 혼합주사모형은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어 근본적 결정의 경우 점증모형을, 세부적 결정의 경우 합리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 드로(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서 메타정책결정 단계(meta-policy making stage)에 해당하는 것은 정책결정 전략의 결정, 자원의 조사·처리 및 개발,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 등이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 (○)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자가 합리적 경제인으로서 전지전능한 인간이라고 가정한다. 포괄적·총체적 합리성을 지니고 사회에 대한 명확한 가치 선호가 존재한다고 본다.
 ㉡ (×)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 않고 몇 개의 대안에 대해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인 대안 탐색을 하며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을 때까지 계속한다고 본다.
 ㉢ (×) 정책의 분할가능성이 높은 경우(분할적 결정, 가분적 결정) 지분법(branch method, 支分法, 가지점근법)이나 부분적 최적화를 추구하기 용이하므로 점증모형 적용이 용이하다. 반면 합리모형은 전체주의와 유기체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므로 비가분적 정책결정에 적용하기 용이하다.
 ㉣ (×) 혼합탐색모형은 A. Etzioni가 합리모형의 비현실성과 점증모형의 보수성을 탈피하여, 양자의 장점을 혼합한 모형이다. 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 부분에서는 대안의 고려나 결과 평가를 대상으로 합리모형의 의사결정을 따르고 세부적 결정은 근본적 결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증모형의 방법으로 개선된 대안을 마련한다.

■ 혼합탐색모형의 기본적(근본적) 결정과 세부적(부분적) 결정의 지속적 교호작용

구 분	기본적·근본적 결정(Fundamental Decision)		세부적·부분적 결정(Bit Decision)	
	세부결정을 위한 테두리나 맥락을 결정하는 행위. 환경의 급변, 전체적 문제상황의 변화시 행함.		기본적 결정의 구체화·집행. 안정된 상황에서 단기적 변화에 대처.	
대안탐색 (고려할 대안의 수)	중요한 대안을 포괄적으로 모두 고려 (포괄적 합리모형)		기본적 결정의 범위 내에서 소수의 대안만 고려 (점증주의)	
대안분석 (각 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들의 중요한 결과만을 개괄적으로 예측 (합리모형의 엄밀성을 극복)		대안의 결과는 세밀하게 분석 (포괄적 합리모형)	

구 분	합리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기본적 결정)	혼합모형(세부적 결정)
고려할 대안의 수(대안탐색)	포괄적	한정적	포괄적(전체)	한정적(부분)
각 대안의 결과예측(대안분석)	포괄적	한정적	한정적(개괄적 예측)	포괄적(세밀한 예측)

㉠ (×)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는 Post-policy making(정책결정 이후) 단계에 해당된다.

■ **최적모형의 정책결정 단계**(아래 단계 외에도 모든 국면들을 가로지르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의사전달과 환류'가 추가됨)

1. Meta-policy making stage(초정책결정단계) ⇒ 주로 초합리성 적용	2. Policy making stage(정책결정단계) ⇒ 주로 합리성 적용(합리모형)	3. Post-policy making(정책결정 이후단계)
① 가치의 처리 ② 현실의 처리 ③ 문제의 처리 ④ 자원에 대한 조사·처리·개발 ⑤ 정책결정체계 설계·평가·재설계 ⑥ 문제·가치·자원의 할당 ⑦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① 자원의 세부적 할당 ② 우선순위에 의한 구체적 목표 설정 ③ 우선순위에 의한 중요 가치군 설정 ④ 좋은 대안을 포함한 주요 대안군 마련 ⑤ 각 대안의 비용·편익의 예측 ⑥ 대안의 비교 및 최선의 대안 발견 ⑦ 최선의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평가	①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 ② 정책의 집행 ③ 집행 후의 정책평가

* 암기법 : 2단계는 '세부', '대안', '설정'이, 3단계는 '집행', '평가'가 들어감. 나머지는 1단계

답 ①

15 집단적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020 경간부

- ① 회사모형은 문제 중심적 탐색, 갈등의 완전한 해결, 표준운영 절차 중시 등을 특징으로 한다.
- ② 쓰레기통모형은 위계적인 조직구조의 의사결정과정에 적용이 용이하다.
- ③ 킹던(Kingdon)의 '흐름창(Policy Window) 모형'은 정책 창문이란 번 열리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된다고 본다.
- ④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책결정자는 정책결정의 회피와 지연, 정책문제의 재규정, 상충되는 정책대안의 동시선택 등의 대응행동을 보일 수 있다.

해설

- ① (×) 갈등의 완전한 해결 ⇒ 갈등의 준해결(quasi-resolution of conflict)
- ② (×) 쓰레기통모형은 느슨한 형태로 구조화되어 운영되고 계층제적 권위가 없으며 상하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대학조직(collegial structure)이나 연구소에 잘 적용된다.
- ③ (×) 킹던(J. Kingdon)에 의하면 정책의 창은 매우 좁고 희소한 자원으로서 오래 열려 있지 않고 곧 닫히며 정책의 창이 열릴 경우에도 아무런 행동 없이 지나치게 되면 그 창은 오랫동안 다시 열리지 않을 수 있다. 정책의 창은 여러 요소들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아주 짧은 일정 기간만 열리게 된다.
- ④ (○) ■ **정책딜레마에 대한 대응 형태**

소극적 대응	① 정책결정의 회피(포기, 비결정, inaction) ③ 결정책임의 전가	② 정책결정의 지연(procrastination) ④ 다른 정책에 의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상황의 호도
적극적 대응	① 딜레마 상황의 변화 유도 ③ 정책문제의 재규정 시도 ⑤ 선택한 대안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상징조작	② 하나의 딜레마상황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새로운 딜레마 상황 조성 ④ 상충되는 정책대안들을 동시에 선택 ⑥ 스톱-고 정책(stop-go policy : 쉼바꾸기 전략) 채택

답 ④

16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가 분류한 정책 집행의 유형 중 '협상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20 경간부

- ①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엄격하게 분리되며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을 충실히 집행한다.
- ②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③ 정책결정자는 명백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집행자는 이러한 목표에 대해 동의한다.
- ④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는 정책목표나 수단에 대하여 반드시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해설

-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 ② 관료적 기업가형, ③ 고전적 기술관료형이나 지시적 위임가형, ④ 협상가형

답 ④

※ 나카무라(R.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

고전적 기술관료형 (classical technocrats)	•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를 엄격히 구분, 결정자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집행자들은 이 목표를 지지. • 결정자는 계층제적(위계적) 명령구조를 형성하고, 특정 집행자에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권한만 위임. • 집행자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기술적 문제 정도에서만 미약한 재량권을 부여받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함. • 결정자가 결정한 정책내용을 집행자가 충실히 집행. 결정자가 정책집행자들의 활동을 엄격히 통제함. • 집행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능력을 지님.
지시적 위임가형 (instructed delegates)	•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목표가 수립되고 대체적인 방침만 정해진 뒤 나머지 부분은 집행자들에게 위임됨. • 결정자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집행자는 목표의 소망성에 동의함. • 정책결정자는 정책의 목표를 자세하게 기술하여 집행자들에게 목표달성을 지시하고, 정책집행자는 그러한 목표를 받아들이고, 다만 수단의 선택시에는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지니게 됨. • 집행자는 목표달성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관리적]·협상적[교섭적] 능력을 소유.

협상자형 (bargainers)	•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간 반드시 정책목표나 수단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님. • 공식적 정책결정자가 목표를 제시하지만, 집행자와 목표의 소망성에 대해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님. • 결정자와 집행자 간, 집행자 상호 간 목표와 수단에 관해 협상하며, 힘과 협상력이 우월한 집단의 의도가 많이 반영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됨. 집행자들이 결정자들의 권위에 쉽게 압도당하지 않을 때 나타남.
재량적 실험가형 (discretionary experimenters)	• 정책결정자가 정책수립 능력이 없고, 집행자에게 광범한 재량을 위임하려는 유형. • 정책결정자는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정보·기술의 한계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체적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 수준에 그침(결정자는 추상적인 일반 목표는 지지하지만,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할 능력이 없음). • 결정자는 집행자에게 목표를 구체화하고, 집행수단을 개발하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집행자들은 정책목표의 구체화, 수단 선택, 정책 시행을 자기 책임 하에 관장. • 집행자는 과업의 수행의사와 수행능력이 있음.
관료적 기업가형 (bureaucratic entrepreneur)	• 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권한을 장악하고 정책과정을 완전히 통제 • 집행자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권력을 동원하여 결정자가 받아들이도록 설득이나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집행자는 그들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며 달성할 능력도 보유. • 집행자는 결정자와 협상·홍정하여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얻어낼 수 있음.

구 분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자형	협상자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정책 목표	추상적 목표	결정자	결정자	협상 결과에 따라 역할 분담	결정자	집행자
	구체적 목표	결정자	결정자		집행자	집행자
정책 수단	행정적 수단	결정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기술적 수단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정책집행자의 재량		재량권 적음 ← → 재량권 많음				
정책평가기준		효과성	효과성, 능률성	지지자의 만족도	수혜자에 대한 대응성	체제유지도

17 다음 중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2020 경관부

㉠ 상실요소(experimental mortality)	㉡ 측정(검사)요소(testing)	㉢ 성숙효과(maturation)
㉣ 측정도구의 변화(instrumentation)	㉤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 오염효과(pollution)
㉦ 회귀인공요소(regression artifact)	㉧ 호손효과(Hawthorne effect)	㉨ 표본의 대표성 부족
㉩ 역사적 요소(history)		

-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해설

•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 : ㉠㉡㉣㉤㉦㉧㉨ •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 : ㉥㉩㉪

정책평가의 타당성 저해요인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표본의 무작위배정 및 대표성 관련요인	선발(선정)요인 상실(탈락)요인, 회귀인공요인(실험직전반응효과)	외재적 요인
	대상집단의 특성변화	성숙(성장)요인, 사건(역사)요인	내재적 요인
	관찰 및 측정 관련요인	측정수단(측정도구)요인, 측정(검사·조사·시험)요인	
	비교집단 간의 상호작용	오염·확산(누수·누출), 모방, 부자연스런 반응)	
	복합요인 - 단일 요인들의 상호작용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선정과 성숙의 상호작용, 선정과 사건의 상호작용	외재적 요인 + 내재적 요인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	① 호손효과(실험조작의 반응효과), ② 표본의 대표성 미흡, ③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④ 크리밍 효과·위광 효과(creaming effect), ⑤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실험 전 측정의 반응효과; 사전조사문제), ⑥ 상이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과 실험조작의 상호작용		

※ 크리밍 효과는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도 될 수 있음.

답 ③

18 동기부여이론 중 내용이론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2020 경관부

- ①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 Adams의 공정성이론
 ②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 Vroom의 기대이론
 ③ Skinner의 강화이론 - 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④ Likert의 관리체제이론 - 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

해설

④는 모두 내용(욕구)이론. ①의 Adams의 공정성이론, ②의 Vroom의 기대이론과 ③은 과정이론이다.

답 ④

※ 동기이론의 유형 : 내용이론(욕구이론)과 과정이론

내용이론(content theory), 욕구이론(need theory)	과정이론(process theory)
행위를 야기하는 원인(욕구) 확인에 초점 - 무엇(what)이 행동을 유발하는가? → 욕구(욕구의 내용) 행동과 원인(욕구) 간의 인과관계의 분석. 사람 마음속의 무슨 요인(욕구)이 행동을 유발·유지시키는가? 인간의 행동을 작동시키고 에너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조정하며 유지시키는 내적 요인에 초점. 인간의 욕구와 욕구에서 비롯되는 충동, 욕구의 배열, 유인 또는 달성하려는 목표 등을 설명. 1. 전통적 동기이론 ① 합리적 경제적 인간모형 : 과학적 관리론, X이론과 관련 ② 사회적 인간 모형 : 인간관계론, Y이론과 관련 2. 자아실현적 인간 모형(성장이론, 현대적 모형) ① Maslow의 욕구계층론 ② Alderfer의 ERG이론 ③ Murray의 명시적 욕구이론 ④ McGregor의 X·Y이론 ⑤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⑥ Argyris의 성숙·미성숙이론 ⑦ Likert의 관리체계론 ⑧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3. 복잡인 모형 ① Schein의 복잡인 ②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주1)} * Z이론 : 복잡인, Lundsteht, Lawless, Ouchi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가? - 어떻게(how) 행동이 유발되는가? → 동기유발 과정 행동과 다양한 원인 간 인과관계의 매개경로 분석 동기유발 변수와 동기유발 과정 상호간 관계를 밝힘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욕구충족을 위해 여러 가지 행동 대안 중 어떠한 방법으로 행동선택을 하는가에 초점. 1. 기대이론 ① Vroom의 선택·기대이론(VIE이론) ② Porter-Lawler의 성과·만족이론 ③ Georgopoulos의 통로·목적이론 ④ Atkinson의 기대모형 2. Adams의 형평성(공정성) 이론 3. 학습(강화·순치)이론 ① 행태주의자 학습이론 : ㉠ 고전적 조건화이론(Pavlov), ㉡ 조작적 조건화이론(Skinner) ② 인지학습이론 : Tolman ③ 사회학습이론 : Bandura 4. Locke의 목표설정이론 5. Kelly의 귀인이론

주1) 직무특성이론을 과정이론으로 보는 견해(이중수 외 새행정학 2.0)도 있음.

19 동기이론의 하나인 '강화이론(학습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경간부

- 고정간격 강화는 부하의 행동이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 팀의 주요사업에 기여도가 약한 사람에게는 팀에 주어지는 성과 포인트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은 스키너(Skinner)의 강화유형 중 '소거'에 해당한다.
- 조직의 강화일정 중 초기단계의 학습에서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늘리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연속적 강화'이다.
- 변동비율 강화는 불규칙적 빈도 또는 비율의 성과에 따라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해설

- (X) 고정간격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예 매월 봉급 지급)이며 강화효과는 가장 낮다. 성과(바람직한 행동)의 발생 빈도(횟수)나 비율에 따라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은 고정비율강화이다.
- (O) 성과포인트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하가 원하는 것을 주다가 중단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강화요인을 보류하거나 제거하는 중단(소거, extinction)에 대한 내용이다.
- ④ (O) ■ 학습이론에서의 강화일정(강화계획)

강화일정			의미	장점	단점
연속적 강화			성과(바람직한 행동)가 나올 때마다 강화 예) 정답을 맞힐 때마다 칭찬	초기단계 학습에서 바람직한 행동 빈도를 늘리는데 효과적임	강화효과 빨리 소멸. 관리자에게 큰 도움이 안 됨
단속적 강화	간격 강화	고정간격	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강화 예) 매월 25일 봉급 지급	봉급인상, 진급 등의 보상에 효과적	성과를 높이는데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음
		변동간격	불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강화 예) 보너스, 승진	봉급보다는 칭찬 등 적극적 강화나 회피 등 부정적 강화에 효과적	
	비율 강화	고정비율	일정한 빈도나 비율의 성과에 따라 강화 예) 매출액 증가율에 비례한 성과급	바람직한 행동을 유지하는데 효과적	
		변동비율	불규칙적 빈도나 비율의 성과에 따라 강화 예) 특별보너스, 도박	바람직한 행동을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	

답 ①

20 조직 내의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20 경간부

- 갈등관의 행태론적 입장에서는 모든 갈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 로빈스(Robbins)는 갈등관리를 전통주의자, 행태주의자, 상호작용주의자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 토마스(Thomas)의 갈등관리방안 유형 중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의 중간정도를 만족시키려는 경우는 협동전략이다.
-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갈등이 증가할 소지가 작다.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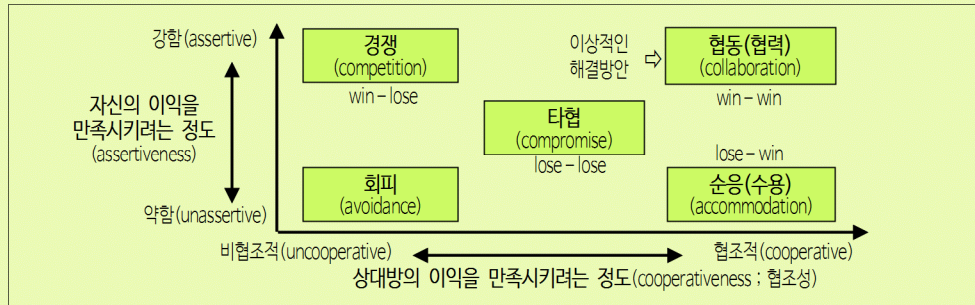
① (×) 모든 갈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은 인간관계론이다. 행태론적 입장에서는 갈등이란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갈등이 역기능과 순기능을 모두 갖는다고 본다.

② (○) ■ 갈등에 대한 관점 - 로빈스(S. Robins)(1983)

- ㉠ 전통적 관점(traditional view) - 제거적 갈등관(1930년대 말 ~ 1940년대 초) : 갈등역기능론. 고전적 조직이론과 인간관계론의 관점에서, 모든 갈등은 파괴와 비능률을 가져오는 역기능적 존재이므로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 ㉡ 행태적 관점(human relations view) - 수용적 갈등관(1940년대 말 ~ 1970년대 중반) : 갈등불가피론. 갈등이란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갈등의 수용입장을 취한다. 이 입장에서는 갈등이 때로는 순기능을 한다고 보지만, 능동적으로 갈등을 조장하지는 않는다.
- ㉢ 상호작용적(상호주의적) 관점점(interactionist view) - 관리적 갈등관[제거 + 조정] (1970년대~현재) : 갈등관리론. 갈등이 오히려 조직 내에서 하나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갈등은 조장하고 부정적 갈등은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갈등수준이 너무 낮으면 환경에의 적응력 저하, 독재와 획일주의, 무사안일, 의욕상실, 침체 등의 집단행동을 보이므로 적절한 갈등수준을 유지하는 최적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③ (×)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의 중간 정도를 만족시키려는 경우는 타협(compromise)이다.

■ 토마스와 킬먼(K. Thomas & R. Kilmann)의 대인적 갈등의 관리방안(2차원 갈등해결 모형)



④ (×)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갈등이 증가하며 업무가 상호 독립적일수록 갈등이 적다.

답 ②

21 리더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경간부

- ① 행태론은 리더와 부하집단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 ② 상황론의 예로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적응모형, 하우스(R. J. House)의 경로-목표모형 등을 들 수 있다.
- ③ 통합이 강조되고 고도의 다양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탈관료제적 조직에서는 거래적 리더십보다 변혁적 리더십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 ④ 상황론은 리더십이 상황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한다.

해설

④ (×) 상황이론에서는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답 ④

22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0 경간부

- ㉠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의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기관들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방식이다.
- ㉡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해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 ㉢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과업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곤란하다.
- ㉣ 유동적이고 모호한 조직경계에 따라 조직의 정체성이 약해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가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부서의 신속한 대응성이 동시에 요구되면서 등장한 조직형태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 (○) 한 조직 내에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의 자체기능은 전략·계획·통제 등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회계·제조·포장·유통 등 여타 부수기능들은 외부기관과의 계약관계(outsourcing)를 통하여 연계·수행하는 구조.
- ㉡ (○)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해 기술변화, 소비자 수요변화,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창의력 발휘를 촉진한다.
- ㉢ (×) 매트릭스구조의 특징이다. 매트릭스구조는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조직단위 간 정보흐름(의사소통)을 활성화시켜 예상치 못한 문제를 파악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한다. 반면, 이원적 권한구조 때문에 과업조정이 곤란하고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결정이 곤란하다.
- ㉣ (○) 조직경계가 모호해 정체성이 약하며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갖기 어렵고 구성원의 충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직이 빈번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 ㉤ (×) 매트릭스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매트릭스구조는 기술적 전문성(기능구조의 특성)과 신속한 대응성(사업구조의 특성)이 동시에 강조됨에 따라 등장한 조직구조로서 전통적인 계층적 특성을 갖는 수직적(종적)인 기능구조(직능조직)와 수평적(횡적)인 사업구조(프로젝트조직)를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신축성을 확보하도록 한 혼합적·이원적 구조의 상설조직이다.

답 ③

23 다음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0 경간부

- ㉠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에 대한 원칙적인 임명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직원 정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
 ㉣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해설

①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의 유형(제5조)

공기업(50명 이상)		준정부기관(50명 이상)		기타 공공기관
공공기관 중 시장성이 큰 기관으로 정부가 자체수입 비율·업무특성을 감안하여 공기업으로 지정한 기관		공공기관 중 시장성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관으로 정부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자체수입비율(자체수입액/총수입액)이 50% 이상인 기관(자체수입비율이 50% 이상이라도 업무특성상 지정 곤란시는 예외)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 지정(자체수입비율이 50% 미만인 기관)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85%) 이상인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 (×)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는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조직·인사·재정 등에 대한 통제기관 요약

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자산 2조 이상		자산 2조 미만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필수		임의	
이사회 의장			선임비상임이사		기관장	
임원 임명권자	기관장(임기 3년)		대통령		주무기관의 장	
	감사(임기 2년)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이사 (임기 2년)	상임이사	기관장		기관장	
		비상임이사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선임상임이사	기획재정부장관	호선		
결산 승인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 ㉢ (×)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 (×), ㉤ (○) 한국방송공사(KBS), EBS,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예 지방직영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이 될 수 없다.

■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 ㉠ 구성원 상호 간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예 한국학교발명협회, 재향군인회, 공인회계사회 등) - 단, 출연·보조·위탁·독점사업 허용 등 정부지원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지정여부 판단.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예 지방직영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 단,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공공기관이 공동출자한 기관은 공공기관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지정 여부 판단.
 ㉢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답 ④

24 거시조직이론 분류 중 임의론에 해당하는 것은?

2020 경간부

- ① 구조적 상황론 ② 조직군 생태학이론
 ③ 전략적 선택이론 ④ 조직경제학(대리인이론 및 거래비용이론)

해설

■ 거시조직이론의 분류

분석수준	환경인식	
	결정론(조직은 환경에 대한 종속변수 / 수동적)	임의론·자발론(조직은 환경에 대한 독립변수 / 능동적)
개별 조직	• 체제구조적 관점 : 구조적 상황론(상황적응론)	• 전략적 선택관점 : 전략적선택이론, 자원의존이론
조직군 (組織群)	• 자연적 선택관점 : 조직군생태학, 제도화이론, 조직경제학(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 집단적 행동관점 : 공동체생태학이론

답 ③

25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경간부

- ① 품질관리가 서비스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매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 ② TQM은 상하 간의 참여적 관리를 의미하며 목표설정에서 책임의 확정, 실적 평가에 이르기까지 상관과 부하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 ③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행태를 고객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④ 모든 조직구성원들은 한편으로 공급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인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해설

- ①③ (○) 총체적 품질관리란 고객만족을 제1차적 목표로 삼고 조직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 하에 조직의 과정·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전략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원칙이다.
- ② (×) 목표관리제(MBO)에 대한 내용이다.
- ④ (○) 고객중심의 관리전략에서는 외부고객은 물론 내부고객의 만족도 중시한다.

답 ②

26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경간부

- ①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과 직업공무원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장했다.
- ②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킹슬리(Kingsley)이며 크랜츠(Kranz)는 비례대표로까지 그 개념을 확대하였다.
- ③ 대표관료제의 한계로 국민주권의 원리 위반, 역할론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내부통제 약화, 임용의 역차별과 갈등의 우려를 들 수 있다.
- ④ 임명직 관료집단이 민주적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해설

- ① (○) 실적주의나 직업공무원제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형식적 기회균등(수평적 평등)만 보장할 뿐 실질적 기회균등(수직적 평등)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한계(사회적 약자들의 공직 취임기회 제약)를 보완하기 위해 대두되었다.
- ② (○) 킹슬리가 제시, 크랜츠는 비례대표로까지 그 개념을 확대.
- ③ 킹슬리(J. Kingsley) : 「대표관료제(1944) ; 영국관료제의 해식」, 대표관료제이론은 영국의 관료제를 연구한 Kingsley에 의해 처음 제기됨. 당시 영국 관료제의 상위직이 대부분 중상층 출신으로 충원되어 그 인적구성에 있어 사회경제적 계층의 편견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 대표관료제의 구성적 측면을 강조하여, 관료제가 모든 사회계층의 이해와 요구에 보다 대응적(responsive)이기 위해서 관료가 중요한 모든 사회계층으로 부터 충원되어,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가 관료제 내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 ④ 크랜츠(H. Kranz) : 대표관료제 개념을 비례대표(proportional representation)로까지 확대. 관료제 내의 출신집단별 구성비율이 총인구 구성비율과 일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료제 내의 모든 직무 분야와 계급의 구성비율까지도 총인구비율에 상응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
- ③ (×) 내부통제 약화 ⇨ 외부통제의 무력화. 내부통제의 강화는 대표관료제의 긍정적 효과이다. 행정관료의 재량권 확대로 인해 입법·정책결정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외부통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료의 책임회피, 공익보다 관료이익이나 특수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행정책임의 확보가 곤란하다. 따라서, 관료조직을 사회 각계각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고루 충원하여,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충분히 검토되고 상호견제하면서 보다 국민 뜻에 부합되는 행정을 실현하는 내부 통제가 가능해진다. 반면 외부통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관료들이 폐쇄적 집단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 오히려 행정의 전체적 책임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며, 외부통제방식의 보완을 추구한다는 미명 하에 외부통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 ④ (○)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행정적 재량성이 증대 따라 관료집단 자체도 단순한 집행기능 외에 정책결정기능과 전문성으로 인해 일정한 독립적 영역을 확보하고, 그 결과 일반국민은 물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들까지도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았으나 신분보장을 받는 임명직 관료집단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대표관료제는 임명직 관료집단이 민주적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답 ③

27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경간부

- ①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제가 아닌 직무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 ② 행정부 전체에 걸쳐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고위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에는 엽관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 ④ 원칙적으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해설

- ① (○)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은 계급·등급을 폐지하고 직무등급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영국도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계급을 폐지하고, 하나의 관리계층집단으로 통합한다. 반면 미국은 '직무' 개념을 포기하고, '계급' 개념을 도입한다.
- ② (×) ② 고위공무원단은 국가공무원인 행정부 내 중앙부처 1~3급 실·국장급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외무직) 직위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1~3급 실·국장급인 국가공무원(예·도·특별자치도의 행정부지사, 광역시·특별자치시의 행정부시장, 부교육감 등)도 포함된다.
- ③ (○)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정무직위 확대를 통한 정치적 대응성을 높이며 한 점에서 엽관주의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 ④ (○) 고위공무원단의 보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며 이 중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 직무성과급적 연봉 : 직무의 곤란도·책임도를 반영한 직무등급별 보수 +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

기본연봉(기본급여)	기준급	개인의 경력·누적성과 반영
	직무급	직무의 곤란성·책임도에 따른 직무등급(가, 나 2등급)에 따라 차등 책정.
성과연봉(성과급여)	전년도 업무실적·성과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호봉제 적용 고위공무원은 성과연봉 상당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	

답 ②

28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20 경간부

- ① 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며, 직위분류제는 인력 활용의 융통성을 높여준다.
 ② 계급제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직위분류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
 ③ 계급제는 인사권자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과 융통성을 주어 리더십을 강화시켜준다.
 ④ 직위분류제에서는 계급 간의 수직적 이동이 곤란하다.

해설

- ① (×) 앞부분은 옳지만 뒷부분이 틀렸다. 직위분류제는 동일 직렬에서의 승진이나 전보는 가능하나, 다른 직무로의 전직이 어렵기 때문에 인력 활용의 탄력성과 융통성이 약하다.
 ② (×) **■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대응력 : 외부 환경(국민)에의 대응력과 직무 변화에의 대응력**
 ㉠ 외부 환경(국민)에의 대응력은 직위분류제가 높음 : 직위분류제는 개방형과 결합되어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공직을 관찰해 오던 외부인사에게 충원의 문호를 개방하므로 민의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 계급제는 폐쇄성으로 인한 무사안일을 초래하거나 특권집단화되어 결국 국민의 요구에 민감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공직의 경직화를 야기할 수 있음.
 ㉡ 직무 변화에 대한 대응력은 계급제가 높음 : 계급제는 인사관리(인력활용)의 탄력성·융통성·신속성이 커 직무변화에 신속히 대응 가능. 직위분류제는 지나친 직무구조의 편협성과 비탄력적 분류체계 때문에 직무변화에 신속히 대응 곤란.
 ③ (○) 계급제는 분류구조와 보수체계가 단순하고 전직·전보가 용이하며 승진의 폭이 넓어 인사관리(인력활용)의 탄력성·융통성·신속성이 크다. 관리자 입장에서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인사권자의 재량이 커지며 리더십 발휘가 용이하다.
■ 인사권자의 리더십
 ㉠ 폐쇄형보다 개방형의 경우 인사권자의 리더십·영향력이 더 큼 : 폐쇄형은 인사기준으로 경력(연공서열)이 강조되므로 인사권자의 영향력이 약함. 개방형은 임용 여부에 대한 판단에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인정되어 인사권자의 리더십·영향력이 큼.
 ㉡ 직위분류제보다 계급제가 인사권자의 리더십이 더 큼 : 인사권자는 조직의 직무와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면 조직 구성원에 대한 리더십을 행사할 필요가 없음. 또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 인사권자의 권한은 작아짐.
 ④ (×) 계급제는 계급 간 엄격한 구분과 계급 간 승진의 곤란성으로 인해 수직적 융통성은 낮다(수직적 이동 곤란). 연공서열을 강조하는 계급제와 달리 직위분류제는 능력을 갖춘 경우 승진이 가능하므로 수직적 이동이 계급제보다 더 용이하다.

인력 활용	계급제	직위분류제
수평적 융통성(이동성)	높음(일반행정가를 중시하고, 계급만 동일하면 전직·전보가 탄력적으로 이뤄짐)	낮음(전문행정가를 지향하고, 다른 직무로의 전직이 어려움)
수직적 융통성(이동성)	낮음(계급 간 엄격한 구분을 강조하고 계급 간 승진 곤란, 연공서열 기준 승진)	높음(승진 기준은 실적·능력이며, 연공서열은 고려하지 않음)
외부 개방성	낮음(폐쇄형 임용)	높음(개방형 임용)

답 ③

29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2020 경간부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결과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대통령에게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송부한다.
 ㉡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에서 상임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실정법으로 금지된다.
 ㉣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이 이루어진다.

① ㉠, ㉡, ㉣

② ㉠, ㉢

③ ㉡, ㉢

④ ㉡, ㉣

해설

- ①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지만, 본회의에 보고될 경우 대통령에게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송부하는 주체는 위원장이 아니라,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다.
 • 인사청문회법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친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 또는 인사청문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②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 주의 : 위원회(인사청문특위, 소관상임위)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인사청문회법 9조 ①항).
 ③ (×)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에서 상임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실정법으로 막을 수 없다.

•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 ① 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 (○) ■ 인사청문 대상

구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		소관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국회의 동의 필요	국회에서 선출	
대법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3인	헌법재판관 6인(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중앙선거위	☑ 중앙선거관리위원(x)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6인(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행정부	국무총리 감사원장 ☑ 감사위원(x)		국무위원(각부 장관), 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방통통신위·공정거래위·금융위·국가인권위 위원장, 합동참모의장, 특별감찰관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x),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x)
기타			한국은행 총재, 한국방송공사 사장

답 ④

30 근무성적평정의 유형 및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경간부

- ① 평정자가 모든 피평가자들에게 대부분 중간범위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은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이다.
- ② 근점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배분법을 들 수 있다.
- ③ 근본적 귀속의 착오(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는 타인의 실패를 평가할 때에는 개인적 요인을 과대평가하고 타인의 성공을 평가할 때에는 상황적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 ④ 평정자마다 척도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지각과 이해가 상이할 경우 평정상의 오류가 범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도표식평정척도법에서 많이 나타난다.

해설

- ② (×) 강제배분법은 분포의 오류(관대화, 집중화, 엄격화)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시간적 오류인 근점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MBO식 평정, 중요사건기록법, 평가센터법, 행태관찰평정척도법 등을 활용한다.

■ 근무성적평정의 오류 방지를 위한 대처방법

평정의 오류	대처 방법
연쇄효과	㉠ 강제선택법이나 프로브스트법을 사용해 평정요소 간 연쇄효과 배제 ㉡ 각 평정요소별로 모든 피평정자를 순차적으로 평정(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피평정자 전원을 평가한 후 다음 요소를 평가) ㉢ 평정요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유사한 요소의 배치를 멀리 떨어지게 하는 등 평정요소별 배열순서에 유의. ㉣ 평정척도를 만들 때 등급을 서로 달리하는 방법을 사용
집중화 경향	강제배분법, 서열법, 행태기준평정척도법, 체크리스트법(프로브스트법)
관대화·엄격화 경향	강제배분법, 서열법
시간적 오류	MBO평정법, 중요사건기록법, 평가센터법, 행태관찰평정척도법
선입견	직속 상사 이외에 제3자를 평정자로 활용

- ③ (×) 근본적 귀속(귀인)의 착오는 타인의 행동(주로 부정적 행동)을 평가할 때 개인적 요인을 과대평가하고 상황적 요인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다. 즉, 타인의 실패와 성공을 구별해서 실패시 개인적 요인을 과대평가하고 성공시 상황적 요인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③번 지문은 일부 수험서에 잘못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출제된 듯 보인다.

■ 귀인오류 : 근본적 귀인의 착오와 이기적 편견

근본적 귀인[귀속]의 착오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타인의 행동(주로 부정적 행동)을 평가할 때 외재적 요인(상황 요인)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행위자의 성격·동기·태도·능력·신념 등 내재적 요인(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
이기적[자존적] 편견 [자기과양적 귀인 편향] (self-serving bias)	자신의 성공을 평가할 때에는 내재적 요인(자신의 능력·노력 등 개인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실패를 평가할 때에는 외재적 요인(상황 요인)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 일종의 자기 합리화로서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성공에 대한 개인적 공로만 강조.

- ④ (○) 도표식 평정은 평정요소에 대한 등급 간 차이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등급지정 기준이 모호해 평정이 주관적·임의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 정답여부 : 출제기관 측은 ②를 답으로 보았으나 ③도 답이다.

답 ②③

31 공무원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방법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경간부

- ① 거버넌스적 접근 - 부패란 정부주도의 독점적 통치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와 시민간의 동등한 참여나 상호보완적 감시에 의한 협력적 네트워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 ② 체제론적 접근 -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운영의 미숙 등이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 ③ 사회문화적 접근 -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며 부패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종속변수로 본다.
- ④ 도덕적 접근 - 부패는 개인의 비도덕성과 같은 윤리의식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해설

- ① (○) 거버넌스적 접근은 행정부패를 관리방식의 문제가 아닌 정부-사회 간 구조와 맥락의 문제로 접근하므로 정부와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수평적 협력관계 속에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② (×) 법적·제도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이다. 체제론적[체계적] 접근법은 부패는 단일 요인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부패에 대한 기업적·부분적인 대응만으로는 부패를 억제하기 곤란하다고 본다.

답 ②

32 예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경간부

- ①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은 행정이 소극적 성격을 가졌던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② 관리지향적 예산원칙은 예산과 기획의 밀접한 관계를 중요시하였다.
 ③ Neumark의 예산원칙은 예산을 통제수단으로 파악하였다.
 ④ 사전의결(절차성)의 원칙, 공개성의 원칙, 명확성(명료성)의 원칙, 보고의 원칙은 전통적 예산원칙에 해당한다.

해설

- ① (○)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은 전통적 예산원칙으로서 행정의 소극적 역할이 강조되던 상황에서 재정통제 목적에 적합하였다.
 ② (○) 현대적 예산원칙은 관리지향·계획지향이란 특징을 가지며, 예산과 기획의 밀접한 관계를 중시한다.
 ③ (○) Neumark의 예산원칙은 전통적 예산원칙으로 예산을 행정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보았다.
 ④ (×) 보고의 원칙은 현대적 예산원칙이다.

■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

구 분	전통적 예산원칙	현대적 예산원칙
시 기	19C 근대입법국가	20C 현대행정국가
학 자	F. Neumark, W. Sundelson, A. Smith, L. Say	H. Smith
기 능	통제기능	관리기능·기획기능
이 념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효율성
재량성	입법부(의회) 우위 ⇨ 재정통제, 회계책임	행정부 우위 ⇨ 행정부의 재량성·신축성·융통성
예산분류	명세예산, 품목별 분류	총괄예산, 기능·사업·활동별 분류
내 용	단일성 원칙	다원적 절차의 원칙
	시기적 한정성 원칙(회계연도독립)	시기 신축성 원칙
	공개성·명세성·명료성·엄밀성·한정성·통일성 ·완전성·사전의결 원칙	행정부 재량의 원칙, 행정부 책임의 원칙, 행정부 계획의 원칙, 예산기구 상호교류 원칙, 적절수단구비의 원칙

■ 예산원칙의 분류

선델슨(W. Sundelson)	완전성, 엄밀성, 명료성, 공개성	단년성	단일성	명세성	배타성	•	•	전통적 예산원칙
노이마르크(F. Neumark)	완전성, 엄밀성, 명료성, 공개성	한정성		•	•	통일성	사전의결	
스미스(H. Smith)	완전성, 엄밀성, 명료성, 공개성	한정성	•	명세성	•	통일성	사전의결	
	행정부책임, 예산기구 상호교류, 보고, 다원적 절차, 적절 수단 구비, 시기신축성, 행정부재량, 행정부계획							현대적 예산원칙

답 ④

3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산제도는?

2020 경간부

- 예산이란 경기 순환기를 중심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논리이다.
 ○ 세출규모의 변동을 장기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데 기여한다.
 ○ 경제적 불황기 내지 공황기에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유효수요와 고용을 증대시킴으로써 불황을 극복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① 자본예산 ② 잠정예산 ③ 조세지출예산 ④ 지출통제예산

해설

• 자본예산(CBS ; Capital Budget System)

- ①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시켜 수지균형을 이루게 하여 균형예산을 편성하지만, 자본지출은 대부분 공채발행 등 차입으로 충당하여 단기적으로 불균형예산(적자예산)을 편성하는 것.
 ② 경기변동에 따른 순환적 균형예산과 불경기극복 : 건전재정·균형재정이 불경기(실업) 극복에 공헌하지 못한다고 보고 종래의 단기적 균형예산 대신 장기적 균형예산제도를 채택. 불경기에는 공채를 발행하여 적자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공공사업을 확충시키면서, 경기가 회복되면 흑자예산으로 공채를 상환. 불황기에 적자예산에 의해 유효수요증대와 고용증대 수단으로 활용하여 경기변동조절에 유용.

답 ①

34 영기준예산(ZBB)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경간부

- ① 과거연도의 예산지출이 참고자료로 고려되지 않는다.
 ② 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영기준예산제도의 효용이 제약된다.
 ③ 영기준예산제도는 미국 카터 행정부에서 채택되었던 것으로, 전년도 예산의 답습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현행 사업을 재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④ 영기준예산은 기획의 책임이 집권화되어 있다.

해설

- ① (○) 과거연도의 예산지출(base)을 무시하고 원점(zero base)에서 재검토한다.
 ② (○) 공공부문에서는 국방비, 인건비, 교육비 등 경직성 업무나 경비가 많고 국민생활의 연속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법령상의 제약이 심하기 때문에 사업의 축소나 폐지가 용이하지 않아 영기준예산의 적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 ③ (○) 영기준예산은 감축관리기인 1979년 카터대통령에 의하여 도입된 예산제로서,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에서 탈피하여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조직체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영기준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B·C분석, E·C분석)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과 활동을 선택하여 예산을 결정하는 감축지향적 예산제도이다.
- ④ (×) 영기준예산에서 예산기관의 주된 역할은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다. 현재 사업의 축소지향적 우선순위를 강조하므로 쇠신적 활동을 억제하며 장기적 안목의 결여로 국가적 차원의 장기계획을 위축시킨다. 따라서 계획기능은 집중(집권화)되지 않고 각 운영단위에 분산되어 수행되므로 계획책임은 분권화되어 있다.

- ZBB의 특징

지향	예산기관의 역할	중요정보	필요한 지식	정책결정	계획책임	결정흐름
의사결정 / 감축·평가	정책·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사업계획 및 조직의 목표	계획과 관리기술	부분적·총체적	분산	상향적

4

35 다음 중 ㉠, ㉡에 해당하는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2020 경간부

- ㉠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할 때에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초과경비를 의미한다.
- ㉡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책임소관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 ① ㉠ 수입대체경비, ㉡ 예산의 이체 ② ㉠ 수입대체경비, ㉡ 예산의 이월
③ ㉠ 예비비, ㉡ 예산의 이체 ④ ㉠ 예비비, ㉡ 예산의 이월

해설

- ㉠ **수입대체경비** :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 즉, 국가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예) 대법원 등기소의 등기부 등·사본 발행경비, 외교부의 여권발급경비, 교육부의 대학입시 경비, 각 시험연구기관의 위탁시험 경비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 ㉡ **예산의 이체** : 예산집행 기간 중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업무의 변동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해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체 가능. 예산의 목적은 변경없이 예산집행에 관한 책임소권을 변동시키는 것으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으며 예산의 전용·이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①

36 신성과주의예산(New Performance Budgeting)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경간부

- ① 성과관리를 위해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사용한다.
- ② 과거의 성과주의예산과 비교하여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 ③ 성과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성과 측정·평가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
- ④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 성과측정지표를 개발하기 어렵다는 점은 신성과주의예산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해설

- ② (×) 과거의 PBS는 예산의 형식,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 변경 등 개혁 내용과 범위가 광범위했지만 신성가주의 예산은 이미 발생주의 회계가 발달되어 있고 PPBS도 프로그램예산을 경험한 상태였으므로 큰 틀의 제도개혁으로 보기보다는 성과정보의 예산과정에서의 활용을 예산개혁의 목표로 삼는다.

■ 신성과주의예산의 연계범위와 개혁범위

신성과주의예산의 연계범위가 더 넓은	PBS는 예산편성과정에 국한되나 신성과주의 예산은 인사, 조직, 예산, 평가, 감사 등 국정전반에 연계됨
신성과주의예산이 예산개혁 범위가 더 좁고 개혁 목표가 더 단순함	과거의 PBS는 예산의 형식,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 변경 등 개혁 내용과 범위가 광범위했지만 신성과주의 예산은 이미 발생주의 회계가 발달되어 있고 PPBS등 프로그램예산을 경험한 상태였으므로 큰 틀의 제도개혁으로 보기보다는 성과정보의 예산과정에서의 활용을 예산개혁의 목표로 삼음

②

37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0 경간부

-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Arnstein의 주민권력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결과적 측면보다는 과정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로 예산심의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 ㉣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ㄴ, ㅁ

해설

㉠ (○) 주민참여예산은 Arnstein의 주민권력단계에서 나타나는 제도로써, 주민권력의 단계에서는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 Arnstein의 주민참여 유형(주민의 영향력 기준 - 제도적 참여 분류)

비참여단계	① 조작(manipulation) ② 심리적 치료(therapy)	주민을 계도·치료하며, 참여를 조작하거나 흥내내는 단계. 단순한 주민포섭
명목적 (형식적) 참여	③ 정보제공(informing) ④ 상담(consultation) ⑤ 유화(회유; placation)	주민들은 참여의 가능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책결정·집행의 최종결정권은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형식적 참여에 그침.
주민권력적 참여	⑥ 쌍방협동(대등협력·동업자;partnership) ⑦ 권한위임(delegated power) ⑧ 자주관리(시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권력이 우월한 단계. 주민들이 행정과의 협상과정을 통해 정책결정·집행에 관여하고, 자치를 하는 단계. 주민의사의 적극적 반영.

㉡ (○) 참여예산제는 **결과 측면보다는 과정 측면의 이념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 참여예산제의 이념

㉠ 결과적 측면: 대응성·효율성(배분적 효율성, 기술적 효율성)·형평성(계층·지역 간, 성별 등). 주민의 요구(수요)가 반영된 효율적이고 공평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

㉡ 과정적 측면: “누구나(개방성), 함께(공동체성), 똑같이(평등성), 자유롭게(민주성), 공개적으로(투명성) 토론하는(담론지향성)” 참여를 지향. 참여예산제는 결과 측면보다는 과정 측면의 이념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음(주민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강화시키는 참여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

㉢ (×) 주로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의미한다.

협회의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단계에 대한 참여에 초점을 두지만 광의로는 예산과정 모든 단계에서의 주민참여를 의미한다. 지방재정법 39조는 종전 ‘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로 개정되어 사업집행·평가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 주민참여예산제는 2004년 광주시 북구 조례로 도입, 2006년 **지방재정법** 규정해 자율적 시행,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의무화

㉤ (○) 지방재정법 제39조 ③항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주민참여예산 관련 규정

지방 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시행할 수 있다 x).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실시하여야 한다x).	• 법적 근거 • 시행의무 • 주민참여예산기구 둘 수 있음 • 의견수렴, 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해야 함 • 행안부장관의 제도운영 평가 가능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반영하여야 한다x)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통령령x)로 정한다.	• 참여방법 • 주민의견 반영 가능 • 범위·의견수렴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함

답 ④

38 옴부즈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경간부

①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제도이다.

② 옴부즈맨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직접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③ 옴부즈맨은 시민의 요구나 신청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맨 기관에 해당한다.

해설

④ (×)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맨과 유사한 기관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서 인권보호 기관이다.

답 ④

39 다음 중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20 경간부

-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②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을 지닌다.

해설

- ① (×)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 (×)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중앙정부가 보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사무배분의 원칙)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방식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9조 ①항은 포괄주의[개괄주의]를, ②항은 예시주의를 규정하여 포괄적 예시주의[개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상대적인 지문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정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불이행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구속력이 약하여 강제력이 없다고 보아 ④를 틀린 내용으로 본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을 통보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105조 ④ 항의 내용으로 옳음(결정사항의 법적 구속력이 있음)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은 강제력을 지닌다.

⇒ 두 가지 해석이 가능(상대적 판단 필요)

- ① (×) 결정에 불이행시 직무이행명령·대집행 등 실질적인 구속력 확보장치가 없으므로 강제력이 없다는 견해(일반적 입장).
 ④ (○) 시행령상 협의·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어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강제력 있다는 견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사항 결정과 관련해 시험에 출제될 경우 다음 표현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다.(○) / 불이행시 직무이행명령·대집행을 행사할 수 있다.(×)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다.(×)

답 ③

40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중 가장 나중에 도입된 것은?

2020 경간부

- ① 주민투표제 ② 주민소환제 ③ 주민소송제 ④ 조례제정개폐청구제

해설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연혁(조·감·투·소·환)

구분	시행연도	근거 법률	비고
주민감사청구/조례제정·개폐청구	2000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 1999년 규정
주민투표	2004년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에는 1994년 규정(법률로 정하도록 함). 주민투표법 2004년 제정·시행
주민소송	2006년	지방자치법	2005.1. 지방자치법에 규정.
주민참여예산	2006년	지방재정법	2006년 1월부터 자치단체가 자율 시행하도록 함. 2011년 9월부터 의무화 함.
주민소환	2007년	주민소환법	지방자치법에는 2006년 규정(법률로 정하도록 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006년 제정

답 ②